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9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춘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노력,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등에 도정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남도제공

김영록 지사,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9일 "새 정부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춘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노력,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극복 등에 도정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 방향과 전남의 현 상황을 토대로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해온 '전라남도 특별자치도'는 새 정부 5극 3특 정책에 따라 초광역 지역발전 정책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광주·전남 행정통합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광주시와 오는 27일 선포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전남의 비교우위 자원인 재생에너지와 해양자원에 대한 맞춤형 특례를 담은 '전

새 정부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 발맞춰 행정 통합 '전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 적극 노력
 호남선 요금 개선 등 도정 주요 현안·추진 방향 제시

남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나선다. 전국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자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기반사회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형 재생에너지 개발로 에너지 기본소득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정부 국정과제에 중점 반영된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을 공공주도로 이끌어 전남이 RE100과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특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총 23GW 발전을 달성하고 새 정부 '기본소득'의 일환으로 전남이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규제, 미국 관세 충격으로 위기에 놓인 석유화학·철강 산업을 재도약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고용 회복, 기술개발 등 3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자원순환 시범산단, 스페셜티 합성고무 제조 등 총 1천520억 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석유화학·철강 산단을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하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산단으로 신속히 전환해 기업의 전기료 부담도 완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호남선·전라선 고속철도의 불합리한 요금과 좌석 부족 문제도 적극 개선토록

나서기로 했다. 오송역 후회해 따른 추가 요금을 포함·전라선 이용객이 부담해온 현실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천안아산~광주 직선 신선 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불편을 덜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 국정과제에 들어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의 사제 채택 등을 도입키로 한데다, 공공의대는 국립의료원에 설립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2027학년도 설립을 기대했다. 전라남도 국립의대가 설립되면 지역의료체를 가장 먼저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조사에 대해선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진상규명, 특히 유가족이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정 주요 현안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 전남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진파 성장의 핵심축으로 도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광주시, 시민참여수당 전국 첫 시범 운영 걷고 타고 느끼는 일상실천 '대자보 도시'

대중교통·걷기·자전거 일상 속 실천하면 최대 3만원 보상

광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위해 9월부터 시민참여수당 첫 시범운영에 나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건강한 도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시민참여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의 '대·자·보 도시' 분야 6개 과제를 모바일 앱 '워크온(Walk On)'을 통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활동 실적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만원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참여자 모집은 8월 20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광주시에 주소소를 둔 만 14세 이상 시민(외국인주민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참여는 가능하지만 보상 지급 때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인원은 2000명이며, 모집인원을 초과하면 추첨으로 선정한다. 신청은 워크온 앱 설치·회원가입한 뒤, 잠

가신청용 큐알(QR)코드를 스캔해 접수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자·보 분야'를 중심으로 6개 과제에 구성됐다. 일반미션으로는 ▲광주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회당 200포인트 지급 ▲생활 속 자전거 이용 회당 200포인트 ▲하루 8000보 이상 걷기 달성 시 회당 100포인트를 지급한다.

특별미션으로는 ▲'걷기 좋은 길' 방문 시 회당 2000포인트(월 3회 한도) ▲'차 없는 거리' 행사 참석 회당 1000포인트(월 2회 한도) ▲지패스(G-PASS) 선불카드 발급 1000포인트(최초 1회 한도)를 지급한다.

하루에 여러 미션을 동시에 수행하면 각각 실적이 모두 반영되며, 같은 미션은 1일 1회만 인정된다. 포인트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되며,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다.

광주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 교통·보행문화 확산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광총 기자

광주시, '현금 없는 시내버스' 성공적 안착

4~7월 현금함 노선별 순차 철거...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 '현금 없는 시내버스'가 시민 불편과 혼란 없이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는 지난 4월부터 4개월에 걸쳐 전체 102개 노선 1044대 시내버스의 현금함을 순차적으로 철거한 뒤 8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 일평균 현금 또는 계좌이체 수입금은 0.3%로 시행 전인 3월 1.6%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은 일부 노선에서 현금함이 운영된 점을 고려하면 전면 시행 8월부터 계좌이체 이용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은 교통카드가 없더라도 ▲운전

원 안내에 따른 계좌이체 ▲선불교통카드 구입 ▲정보무늬(QR)코드 기반 모바일교통카드 발급을 통해 요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광주시는 현금함 철거에 따라 연간 5억 2000만원의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시내버스의 안전성 향상 ▲쾌적한 환경 조성 ▲수입관리 투명성 제고 등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도 기대된다.

배상영 대중교통과장은 "올해는 현금 없는 버스 도입, 광주G-패스 시행, 노선 개편 등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체감도 높은 버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기자

에너지의 내일! 에너지의 미래!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만나요!

무한한 에너지의 시작, SMR 기술

삶을 지켜주는 경제적 에너지

한계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원자력 에너지